

# ‘적대적 2국가론’을 통한 북한의 자기재현 전략: ‘민족’과 ‘평화·공존’ 담론의 변형과 효과

임수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은 북한이 2023년 공식화한 ‘적대적 2국가론’을 계기로 남북의 ‘적대적 공존’ 서사를 통해 자신과 남북관계를 어떻게 재규정하고 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적대적 2국가론’을 김정은정권의 집단적 자기재현 전략으로 개념화하고, 이 과정에서 민족·국가·평화·공존과 같은 핵심 개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자기재현 정치와 관련한 논의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북한의 공식 담론들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정권의 자기재현 전략은 세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매개로 한 담론적 중심축의 이동은 남북을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상정해 온 기존 인식 틀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주의 조선’을 완결된 전략국가로 재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둘째, 평화와 공존은 상호 인정과 협력의 언어에서 벗어나 체제 생존과 자위권, 긴장 관리 능력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재코딩되며, 남북 간 장기적 협력과 제도화된 평화체제를 상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담론적 공간은 축소된다. 셋째, ‘국가·수령·인민’의 유기체적 일체화를 강조하는 자기재현 전략은 ‘국가’라는 포괄적 상징을 통해 ‘수령’의 통치 정당성과 ‘인민’의 참여 논리를 상황에 따라 조율됨으로써, 체제 내부의 결속과 정당성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기능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기재현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체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를 연결해 왔던 상징적·담론적 자원을 약화시키며, 향후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둘러싼 논의가 전개될 개념적 조건 자체를 제약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주제어** 적대적 2국가론, 자기재현, 우리 국가제일주의, 민족, 평화, 공존

## I. 서론

2023년 12월 북한은 ‘적대적 2국가론’을 공식화하고,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두 주권국가’로서 적대적 공존 관계를 상정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통일’과 ‘민족’이라는 기존 상징체계를 축소 및 삭제하는 동시에, 남한을 구조적 적대자로 상정하는 새로운 담론의 서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담론의 전환은 외교·안보 차원에서의 전략적 변화 또는 단순한 대외 정책의 기술적 수정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대 지도자들로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연속성을 스스로 단절하면서까지 체제의 생존을 도모

하려는 심리적·공간적 재편 과정이며, 김정은 체제가 자신과 외부 세계의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인식시키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고도의 ‘자기재현(self-representation) 전략’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정권의 ‘적대적 2국가론’을 통한 주요 담론들이 어떠한 자기재현 메커니즘을 통해 구성되는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과거의 상호 의존적 기표들이 어떻게 변화 및 구축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자기재현이 지니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살펴본 후,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북한이 어떻게 배타적인 독자적 정체성을 새롭게 연출하고 있는지 추적한다. 또한 ‘적대적 2국가론’을 전후하여 생산된 ‘평화’ 및 ‘공존’의 담론들이 어떻게 남북 사이의 적대적 서사를 강화하며 상대를 타자화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김정은정권은 ‘적대적 2국가론’을 매개로 기존에 구축하였던 시공간적 구조를 은폐 또는 변형하고, 스스로의 주체성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둘째, 이 과정에서 ‘평화’와 ‘공존’이라는 언어는 상대방에 대한 억제력 확보와 체제 보위를 위한 ‘적대적 기표’로 어떠한 변용을 겪고 있는가? 셋째, 이러한 주도적 자기재현 전략이 향후 남북 간의 상징 질서를 어떻게 재배치하며, 교류와 협력의 제도적 기반에 어떠한 구조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북한을 단지 전략적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연출하는 권위주의적 주체로 상정하고 관련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권위주의 국가의 ‘자기재현’ 정치

본문은 김정은 체제가 최근 생산하고 있는 ‘적대적 2국가론’의 담론을 중심으로,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독자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재현하며 긴장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배경을 논하고자 한다. 스스로에 대한 묘사는 곧 ‘자기재현(self-representation)’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자기재현을 “스스로(self)가 재구성하는(re) 현실(presentation)”이라고 정의한

다면, 이는 언론 매체나 문화정책 등을 통해 체제가 의도하는 정체성을 투영하고 구축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김연호, 2021).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은 ‘재현’을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해 주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담론과 상징을 통해 구현된 문화적 맥락 속에서 특정 집단의 정체성이 ‘이데올로기적’ 전략에 의해 구성된다고 논한 바 있다. 이처럼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자기재현은 단순한 이미지 투사를 넘어, 체제의 생존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통치 기제이자 전략적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자기재현은 피통치자의 단순한 사상적 맹종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 의미의 프로파간다(Lasswell, 1927; Marlin, 2013)와 구별되는 전략적 충위를 지닌다. 일방적인 주입을 넘어, 체제의 자기재현은 대내외적 정세 변화라는 환경적 압력에 대응하여 체제의 존재 방식과 대외적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시적인 담론 기획에 가깝다. 지배 세력은 위기와 긴장 상태를 통제하기 위해 새로운 담론 질서를 생산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 가능성의 장을 고도로 구조화한다(Foucault, 1982). 즉, 정권이 생산하는 통치 담론 속에서 구성원들은 철저히 지배층이 의도한 바에 따라 현실을 인식하는 ‘주체화(subjectivation)’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는 정권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 긴장 상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하기 위한 하향식 전략의 일환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렌즈를 통해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을 바라보면, 이는 외부 대상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고 체제를 보위하기 위한 치밀한 자기재현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라클라우와 무페(Laclau·Mouffe, 2001[1985])는 ‘정치’를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기표들(평화, 국가, 공존 등)이 특정한 관계 속에 묶여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헤게모니적 실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관점을 따르면, 김정은정권은 과거의 화해나 동질성을 지향하던 기표들을 감추거나 폐기하거나 또는 변형하고, 그 자리에 ‘적대적 국가’와 같은 새로운 기표를 접합(articulation)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누가 ‘우리’이고 누가 ‘적’인가”를 명확히 구획하여 내부의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평화·공존’과 같은 담론의 요소들을 활용하여 외부와의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 등을 포함한 체제 불안정 요소들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전략적 자기재현이 온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 질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동반된다. 집단 정체성이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서사를 통해 구성된다고 간주할 때(Elias, 1992; Ricœur, 1984), 정치적 차원에서 ‘지금 이 어떤 시기인지’를 선언하는 것은 권력 유지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시간 질서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체제의 통제 범위와 가능성을 규정하는 장치로 기능한다(Ricœur, 1984). 예컨대 ‘통일’, ‘민족’과 같은 과거 지향적 논의들을 은폐 또는 단절하고, 현재를 ‘적대적 공존의 시대’로 재규정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상상할 수 있는 대안적 미래(화해나 통합 등)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권력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주도하는 시간의 재편과 ‘2국가론’적 자기재현은, ‘어떤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구조적 조건을 통제함으로써 외부 세계와의 적대적 긴장을 정권의 생존 기제로 활용하려는 거시적 통치 전략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담론을 통해 북한의 자기재현 전략이 어떻게 구축되고 구조화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북한의 공식 담론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의 주된 대상은 당과 정권의 공식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발신하는 핵심 매체인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으로 선정하였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관영 매체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자가 아니라, 지배 세력이 의도하는 특정한 현실 인식과 시간 질서를 대중에게 부여하는 이데올로기적 기구로 기능한다.

대내적 성격을 지니는 『로동신문』과 대외적 공식 스피커 역할을 하는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새롭게 주조해 낸 ‘적대적 2국가론’ 및 ‘평화·공존’의 기표를 대중과 외부 세계에 발신하고 내면화시키는 가장 권위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매체에서 생산되는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를 어떻게 타자화된 대상과 구분 짓고, 독자적인 주체로 재현해 내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가장 유효한 접근이 된다. 분석 기간은 ‘적대적 2국가론’이 공식화된 시점

전후로 설정하여, ‘2국가론’의 담론이 매체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현되었는지 추적하고자 한다.

수집된 관영 매체의 보도문과 공식 문헌들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한다. 체제의 담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고 변형되는 언어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므로, 방대한 텍스트 속에 숨겨진 규칙성과 구조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일차적으로, 단어의 출현 빈도와 중요도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적용한다. 담론의 전환기를 기점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배 담론을 구성하는 핵심 어휘들이 어떻게 재배치되었는지 직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질성과 연대를 강조하던 과거의 융합적 기표들이 점진적으로 소멸하고, 그 자리를 철저한 타자화와 독자적 체제 생존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표들이 대체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도출된 핵심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맥락 분석을 병행한다. 라클라우와 무페(Laclau·Mouffe, 2001[1985])가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 어휘(기표)들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빈도가 높게 나타난 핵심어들이 문맥 속에서 어떠한 수식어 및 서술어와 결합하여 체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대안적 미래를 차단하고 있는지 질적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규명할 것이다.

#### IV. ‘적대적 2국가론’과 ‘국가’로서의 자기재현 전략:

##### 남북 ‘적대적 공존’ 서사의 재구성

#### 1. ‘적대적 2국가론’과 ‘민족’ 담론의 축소: ‘우리 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북한은 2023년 12월 제8기 9차 당전원회의와, 다음 달인 2024년 1월 김정은 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였다. 이는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해 온 기존 공식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선언으로, ‘통일’을 장기적 목표로 전제하던 기존의 담론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는 주요한 변화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남 불신과 미국 중심의 외교 구도 속에서 축적된 대남 적대 담론의 강화 기조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조선중앙통신, 2019/08/08).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변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때늦기 전에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조선중앙통신, 2019/04/13).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한미관계 단절을 선행하지 않는 이상 남북 사이의 대화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논하며, 남한을 독자적인 협력 대상이 아니라 미국에 종속된 하위 행위자로 보다 노골적으로 서술하였다(임수진, 2024). 이 과정에서 남북 협력을 ‘민족공조’의 실천으로 포장하던 기존 논리를 은폐하고, 남한을 ‘민족 내부의 파트너’가 아닌 ‘외세와 결탁한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대내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 통일전선부 김영철 라인을 축출하는 등 대남 대화파를 일선에서 배제하며 대남 정책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였다(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0).

2019년 이후 한반도에 관한 ‘민족’ 담론이 소멸되며 북한 내부에서 강조된 담론이 ‘우리 국가제일주의’였다. 이전까지 강조되었던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경우 ‘김일성 민족’으로 상징되는 조선민족의 우월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차원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 담론은 크게 대내·대외적인 차원에서 두 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 발전의 목표’로서 대내 동원 담론이다. 특히 이는 2000년대 이후 구체화되었는데, ‘사회주의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신적 동원 기제로서 민족 담론을 강조하던 것을 의미한다(김보민, 2021; 배성인, 2002). 주민들에게 ‘조

선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서사를 반복 주입함으로써,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속에서 체제에 대한 충성, 고강도 노동, 외부로부터 자립인 경제체제를 운용하는 '자력갱생' 등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근거로 작용했다는 논의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담론 속 '민족'의 실천 주체는 '한민족'이 아니라 북한 내부 구성원인 '조선민족'으로 한정되어 특정된다는 사실이다. '조선민족', 즉 북한 주민의 우월성이 구현되려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성과를 내야 하므로, 이를 통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발양할 것을 주문하는 논의로 대내 동원 담론이 구성되었다.

또한, 2000년대 이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며 대남 협력 및 통일 담론의 주요 자원으로서 활용되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사업이 확대되자, 북한은 '민족공조'와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더 이상 북한 내부만을 향한 담론이 아니라, "북과 남, 해외 동포를 망라한 온 겨레"를 호명하는 대남·대외용 담론으로 재구성되었다(이무철, 2024). 특히 2004년 신년공동사설은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남북 통일의 구호로서 전면에 부각시키고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한편,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조국통일 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사상적 기치", "반미·자주 통일 전선의 이념적 기반"으로 규정하는 근간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남과 북 사이 존재하던 대립 구도를, '민족'을 통한 남북 연대를 통해 "우리 민족 대 미국"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남북 간 이념·체제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이라는 공통분모를 강조함으로써, 남한 정부·진보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대미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 담론으로 사용되었다(김병로, 2024; 이무철, 2024).

여기서 남북 경협 당시 강조한 '조선민족'의 주체는 '북한 인민'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 주민과 해외 동포까지 포함하는 '온 겨레'를 대상으로 "민족자주", "반미 공동전선", "민족공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우리 민족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올해 통일운동에서 들고 나가야 할 구호이다

(로동신문, 2004/01/01).

여기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외세’로, 남북은 ‘민족 내부’로 구분되었다. 이는 특히 대남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통해 남북 간 정치체제 및 동맹관계(한미동맹)를 상대화하고, ‘민족 대 외세’라는 이분법을 통해 남한 내부 여론과 진보세력을 겨냥한 대남 심리전·여론전의 이념적 틀로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 사업은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성과로 포장되었다. 남북 경험은 여기서 ‘민족 내부의 자주적 통일 노력’으로 묘사되었다. 북한은 경험 사업을 통해 남한 자본과 물자를 유입받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이를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민족공동번영의 길을 여는 실천’으로 선전했다. 즉, 한반도 차원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한편으로는 남북 경험의 상징적 프레임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내에서 ‘민족’과 ‘자주’를 중시하는 세력에게 북한의 대남·통일 정책을 설득력 있게 포장하는 담론적 도구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민족’은 2000년대 이중적인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논할 수 있다. ‘민족’의 논의는 대내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분리하는 단절의 기제인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대남전략에 있어 정치·경제적 연대와 결속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매개로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남북 경험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민족공조의 실질적 기반이 약화되면서,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전략적 효용성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동시에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난과 제재,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와 뒤이은 논설을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에 제시하며 ‘국가’ 개념을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 나갈 애국의 열망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기 합시다(로동신문, 2019/01/01).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이다.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은 또한 나라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교육과 보건, 체육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에서 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떨쳐나가는 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로동신문, 2019/01/27).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단지 상징적 표어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발전 이데올로기’로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정영철(2020), 구갑우(2024) 등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과학기술과 문화의 비약적 발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가속화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신적 기치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존의 ‘우리 민족제일주의’가 ‘김일성 민족’으로 상징되는 민족 공동체의 우월성과 자주성을 강조했다면,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그 중심 범주를 민족에서 국가로 이동시키며 ‘사회주의 조선’으로서 국가의 위대함 및 국력의 부강발전을 강조한 것이다(정영철, 2020; 구갑우, 2024).

지금 우리 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고 있다. 중대한 역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은 국가건설과 활동,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킬수 있는 혁명적인 기치를 들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가 공인하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에 상응하면서도 우리 인민의 강용한 기상과 지향에 부합되는 투쟁의 기치는 바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이다(로동신문, 2019/01/08).

실제로 2019년을 기점으로 『로동신문』 내 ‘민족’과 ‘국가’의 언급 빈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이렇듯 중심 범주를 민족에서 국가로 이동시키며, ‘사회주의 조선’이라는 국가의 위대성과 전반적 국력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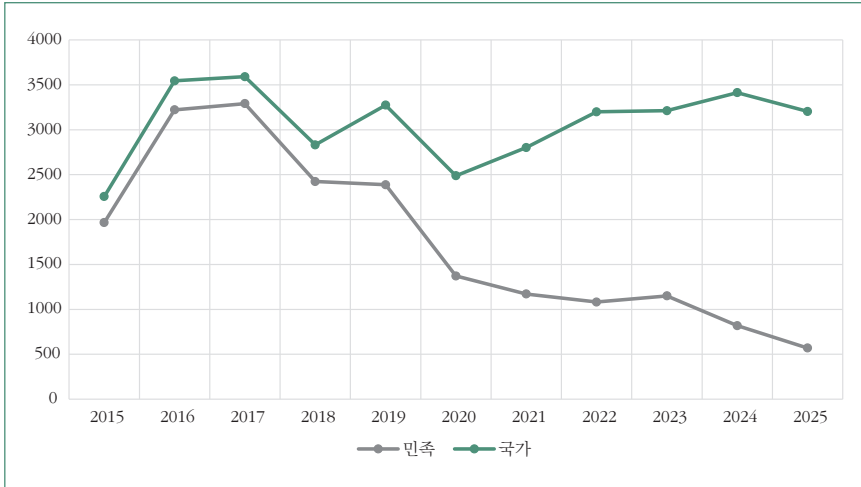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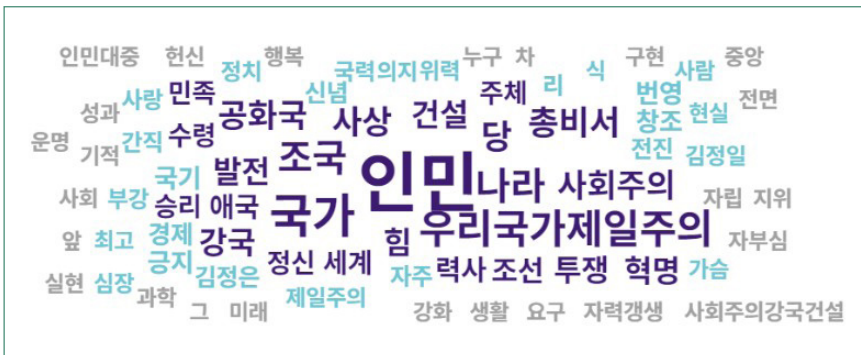


그림 1 『로동신문』 내 ‘민족’과 ‘국가’ 언급빈도(연도별)

## 2.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국가-수령-인민’의 일체화로서의 ‘자기재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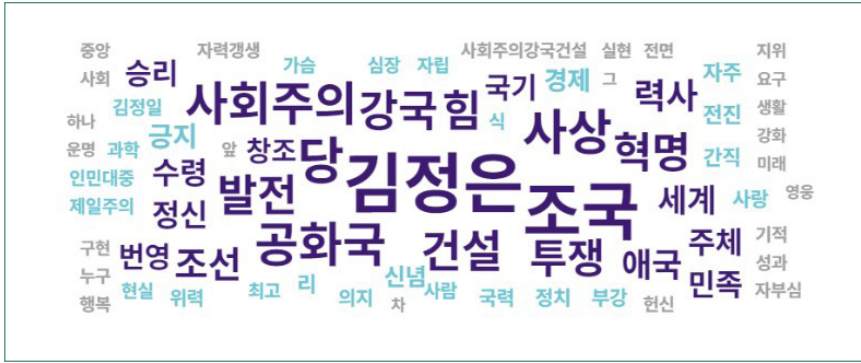
### 1) 국가와 수령의 연계

‘우리 국가제일주의’에서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수령제일주의’와의 연계이다. 구갑우(2024)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북한 특유의 유기체적 국가론 위



주: 2019~2025 『로동신문』 속 빈도 수 높은 상위 75개 단어 추출

그림 2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언급된 기사 워드클라우드



주: 2019~2025 『로동신문』 속 빈도 수 높은 ‘인민’, ‘국가’, ‘우리국가제일주의’ 제외된 상위 75개 단어 추출

그림 3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언급된 기사 워드클라우드

에서 전개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수령제일주의’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의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보면,<sup>1</sup> ‘우리 국가제일주의’에서 가장 중시한 개념은 인민, 국가, 그리고 김정은(총비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로동신문』 등 매체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수령·사상·제도·국력”이 제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대를 이어 ‘위대한 지도자’를 보유한 사회적 공지,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같은 ‘지도사상’에 대한 자부심, ‘인민대중 중심’의 국가사회제도 및 정치·군사·경제 강국으로서의 국력에 대한 자부심 등이 이에 속한다고 서술한다. 이 도식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현재)과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려는 각오와 의지(미래)를 결합시키고, ‘인민’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건설에 “결사의 각오와 의지”로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담론의 수용자인 주민들에게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국가를 생명체로, 인민을 그 생명체를 유지·강화하는 세포로 위치시키는 유기체적 국가 재현을 재강화하며, 국가와 수령, 국가와 인민 사이의 경계를 희미하게

<sup>1</sup> 2019~2025년 『로동신문』의 ‘우리국가제일주의’가 포함된 기사를 추출하여, 언급 빈도가 높은 상위 75개 단어 분석.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즉,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통해 나타나는 공동체적 자기재현의 핵심은 국가, 수령, 인민의 관계 재구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식 담론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수령·사상·제도·국력”이 제일이라는 서술과 결합되며, 국가에 대한 궁지는 곧 수령에 대한 충성과 동일시된다. 국가의 위대성은 수령의 영도와 결부되어 설명되고, 수령을 향한 신뢰와 복종은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떠받치는 정신적 기반으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수령제일주의이다! ... 바로 우리 인민자신이 준엄한 시련의 폭풍우속에서 피와 살로 느끼고 심장으로 정립한 운명의 철리, 위대한 강국의 탄생과 존립의 법칙이다. ... 위대한 수령이 위대한 국가와 위대한 인민을 탄생시킨다! ... 위대한 수령께서 계시여 위대한 국가도 있고 위대한 인민도 있다(로동신문, 2022/09/07)

가장 열렬한 애국, 애족, 애민의 뜻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이 자주적근위병으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선군의 기치높이 조국을 수호하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오늘 우리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다(로동신문, 2020/06/07).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 논의를 통해 국가와 수령은 사실상 상호 치환 가능한 기표로서 만들어지고 있다. 국가가 위대하다는 말은 곧 수령의 영도가 위대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수령을 잘 모시는 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수령-인민의 유기체적 일체를 상징하는 북한 특유의 국가론을 재강화한다. 국가가 생명체라면 수령은 그 두뇌, 인민은 세포이며, 각 세포가 자신의 위치에서 충실히 기능할 때 전체 생명체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은유가 결과적으로는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세포와 주체' 사이 '인민'의 재현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 속 '인민'은 단순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주의 강국'을 만드는 '적극적 행위자'로서 호출된다. '인민'은 '결사의 각오와 의지'로 국가 건설에 참여해야 하며, 자신의 피와 땀을 바쳐 국가의 전반적 국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인민'에게 일정한 주체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주체성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은 국가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되는 부분으로 통제 및 제약한다.

...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다.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피와 땀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 역세계 싸워온 가슴벼찬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 (로동신문, 2022/09/01).

우리 국가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자기의 피와 땀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가는 온 나라 인민의 심장마다에 국가상징에 대한 열렬한 애착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차넘치고있다(로동신문, 2023/07/02).

다음의 논의들을 볼 때, '인민'은 국가 발전의 주체로 칭송되지만, 그 주체성은 국가가 설정한 '과업'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규범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긋남'이나 전유의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열려 있으나, 공식 담론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공식 담론은 사실 선전·선동과 사상사업을 통해 당의 노선과 정책이 군중의 언어로 내면화하며, 규범 수행 과정의 균열을 삭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한동호 외, 2018; 박계리, 2020; 박태상, 2019).

그러나 북한 주민의 욕망과 의식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은, 혁명·헌신·자력갱생과 같은 공식 구호가 주민의 사적 욕망 및 생존 전략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전유·변형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정영철, 2011; 조정아, 2008). 다만 자기재현의 관점에서 볼 때, 체제가 '인민'을 단순히 '복종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강국을 건설하는 주체'로 호출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인민'이 서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틈도 함께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은 이 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수령-인민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상징과 의례를 반복하게 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 나라의 근본은 인민이며 인민이 주인된 나라보다 더 위대한 국가는 없다. 우리 공화국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제도적으로 담보될뿐아니라 이민주권의 리념과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이 구현되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로동신문, 2019/01/08).

다음의 논의를 볼 때,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결합은 일방적인 동원 논리라기보다, 국가가 ‘인민’을 어떻게 위치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자기재현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인민이 주인된 나라’, ‘이민주권의 이념이 구현된 국가’로 설명함으로써, 국가의 정당성과 발전 목표를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연동시켜 제시한다. 이는 국가를 추상적 통치 기구로 제시하기보다는, ‘인민’의 참여와 헌신을 통해 완성되는 공동체로 재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자기재현’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재현 방식이 ‘인민’을 단순한 정책 수용자나 동원 대상으로만 호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가 ‘인민’을 ‘강국건설의 주체’로 호명하는 담론 구조 속에서, ‘인민’은 국가 서사를 일상적 경험과 접목시켜 이해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체제 담론이 ‘인민’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보다는, ‘인민’의 삶의 조건과 접합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의미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국가-수령-인민’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통합적 담론이면서도, 그 효과는 담론이 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는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 북한의 통제장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수용과 해석의 여지가 곧 자율적인 담론의 형성이나 권력 관계의 수평적 재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한다. 김정은정권이 대중의 일상과 현실을 국가 서사에 결합시키는 것은, 거시적인 지배 이데올로기가 초래할 수 있는 대중과의 심리적 간극을 최소화하고 통치의 정당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담론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담론이 대중의 구체적인 일상과 결합하는 미시적 층위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현실적 생존 조건에 맞추어 그 의미를 부분적으로 전유(appropriation)하거나 미세하게 굴절시키는 최소한의 상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기도 하다. 담론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의미 ‘조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현재

북한의 구조를 고려할 때 그 허용 범위는 당과 권력층이 미리 설정해 둔 규범적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향식(top-down) 통제 구조가 보다 정교하게 기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적대적 2국가론’과 남북의 ‘적대적 공존’ 서사: ‘평화·공존’ 담론의 재구성

#### 1) 자위·억제로서의 ‘평화·공존’ 담론

‘적대적 2국가론’과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부상하며 변화된 주요한 담론 중 하나가 ‘평화·공존’의 논의들이다. 사실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기초의 차이는 있으나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오랜 분단 체제 속에서 남북은 각자의 논리로 ‘민족’의 개념을 포함하여, ‘평화’, ‘공존’ 또는 ‘평화공존’의 개념과 논리를 발전시켜 왔다.

원칙적으로 남북 모두 ‘민족적 동질성’에 기반한 연대와 통일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며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실상 남북 양측은 ‘평화·공존’ 담론을 각자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 내용과 핵심 개념을 이질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남한에서 ‘평화’는 주로 국제적 규범과 제도적 협력 질서 속에서 분단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는 과정적 개념으로 발전해 왔다(김병로, 2024). 여기서 ‘평화’는 단순한 무력 충돌의 부재를 넘어, 교류와 협력, 신뢰 구축을 통해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상태로 이해되었으며, ‘공존’은 체제의 차이를 전제로 하되 상호 인

표 1 남북 간 주요 합의문에 나타나는 ‘민족’의 가치

주요 합의문	주요 원칙 및 내용
7·4 남북공동성명(1972)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남북기본합의서(1991)	민족 화해, 긴장완화, 평화 보장, 교류협력
6·15 남북공동선언(2000)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출처: 임수진, 2025, “남과 북의 평화공존 담론 변화 분석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재인용.

정과 관리 가능한 관계 설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북한의 ‘평화·공존’은 민족 담론과 결합되어 전개되었음에도, 그 핵심은 체제 안전과 주권 확보의 문제에 보다 밀접하게 연동되어 발전되어 왔다. 북한은 ‘평화’를 상호 양보와 제도적 협력의 산물이라기보다, 외부 위협에 맞서 ‘자위적 역량’을 갖춘 주권국가의 도달로서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즉, ‘평화’는 군사력과 억제력을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고, ‘공존’ 역시 상호 협력의 제도화라기보다는 적대가 관리되는 국면, 혹은 대결이 통제되는 상태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김병로, 2024).

이러한 구조적 이질성은 ‘평화·공존’ 담론이 설정하는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담론이 제도적으로 고착되는 방식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한에서 ‘평화·공존’은 전쟁 방지나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협력·사회문화 교류·인도적 접촉·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등을 점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분단 상황을 관리하고 관계의 안정성을 제도화하려는 포괄적 협력 질서로 이해되어 왔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문화·체육 교류와 같은 사례들은 군사·외교 영역을 넘어 일상적 접촉과 상호 의존을 확대함으로써 갈등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려는 실천으로 의미화되었으며, 이러한 실천들은 평화공존을 ‘과정적 개념’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임수진, 2025).

반면 북한의 ‘평화·공존’ 담론은 제도적 협력의 확대보다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제재에 대응하는 자위적 억제력의 정당화, 체제 전환 압력의 차단, 주권국가로서의 지위 재확인과 보다 긴밀하게 결부되어 전개되어 왔다. 이 맥락에서 평화는 상호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라기보다 이미 확보된 군사력과 억제력을 전제로 성립하는 상태로 규정되었고, 공존 역시 협력의 제도화가 아닌 적대의 관리 또는 대결의 통제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임수진, 2025). 그 결과 남과 북은 ‘평화공존’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상이한 목표와 실천을 정당화하는 비정형적 담론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는 남북이 평화와 공존을 통해 상정할 수 있는 관계의 범위와 방향성을 구조적으로 어긋나게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되었다.

‘평화·공존’ 담론의 이질성은 김정은 체제의 ‘적대적 2국가론’ 이후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2023년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와 2024년 시정연설

표 2 남북 '평화공존' 담론의 주요 내용

	남한	북한
목표	공존을 통한 통합	공존을 통한 분리
방법	협력(cooperation)	자위(self-defense)
제도화	평화 담론을 국제법 및 제도 내 포섭	평화 담론을 국가자위체제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강화

출처: 임수진, 2025, “남과 북의 평화공존 담론 변화 분석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재인용.

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재규정하며 북한은 더 이상 남북 공동의 협력 상태를 기대하거나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평화의 원수들은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고 ... 주권국가들의 안전을 해치고있다. ... 실제로 미국과 한국의 전쟁소동으로 교전쌍방이 침예하게 대치되어있는 조선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 국제정세흐름은 그 누구도 평화를 선사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 자위력은 국가존립의 뿌리이고 발전의 담보이며 군력이 자 국가와 인민의 안전이고 존엄이라는것,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평화의 원수들과 끝까지 맞서싸워야만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로동신문, 2025/06/03).

(한국 정부는) ... 실종된 평화의 복귀와 무너진 남북관계의 복원을 운운 ...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간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명령에 ...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 한미동맹에 대한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 임자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 우리의 남쪽 국경너머에서는 침략적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건힐 날이 없을것이며 ... (조선중앙통신, 2025/07/28)

북한 매체들은 ‘평화’를 ‘우리식 사회주의를 보위’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언어로 위치시키고, 핵·미사일 전력과 군사력의 현대화를 ‘평화 수호’의 필수 조건으로 논하는 담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평화’는 자위·억제 담론 속에 흡수되며 그 의미가 재구성되고 있다. 첫째, ‘평화’는 외세

와 남한의 ‘침략 책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의 결과로 서술된다. 북한의 공식 담론에서 핵무력과 각종 전략무기 체계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결정적 수단’으로 위치 지어진다. 이때 ‘평화’는 비군사적 협력이나 신뢰 구축의 산물이 아니라, 압도적 억제력을 확보한 이후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상태로 재현되며, ‘군사력 증강’은 평화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 평화를 ‘담보하는 행위’로 정당화된다.

둘째, ‘평화’는 상호 합의나 규범 준수를 통해 달성되는 관계적 기준이 아니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안전 임계치를 충족한 상태를 지칭하는 자기 기준화의 언어로 전환된다. 평화의 조건은 상대의 행위나 태도 변화와 연동되기 보다는, 북한이 판단하는 위협 수준의 감소 여부에 따라 규정되며, 그 기준 역시 북한 내부 담론에서만 정의된다. 이로써 ‘평화’는 협상의 목표나 공동의 규범이 아니라, 북한이 선언할 수 있는 상태 진술의 성격을 띠게 되고, 외부와의 상호 검증이나 제도화는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난다.

셋째, ‘평화’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외부로 전가된다. ‘평화’ 실현이 지연되거나 긴장이 지속될 경우, 그 원인은 일관되게 남한과 미국의 ‘적대 정책’, ‘군사적 압박’, ‘이중적 태도’에 귀속되며, 북한 내부의 정책 선택이나 구조적 제약은 서사의 중심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책임 전가 구조 속에서 평화는 달성되지 않은 목표가 아니라, 외부의 방해로 인해 보류된 정당한 상태로 설명되며, 그 결과 군사력 강화와 내부 동원은 지속적으로 정당화된다. 다시 말해, ‘평화’ 담론은 실패를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라, 체제의 선택과 방향을 보호하는 방어적 서사로서 전유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담론의 재구성 속에서 ‘평화’는 공유 가능한 규범적 목표가 아닌 체제의 군사·안보 전략을 미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공고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관리 가능한 적대’로서 ‘공존’ 담론의 활용

‘적대적 2국가론’의 서사 속에서 ‘공존’은 시간적 또는 가능성의 공간적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공존’은 원래 남북이 서로의 실존을 인정하고, 체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를 병행하

는 상태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대적 2국가론’ 이후 북한에서 ‘공존’은 ‘협력 가능한 상호 인정’이 아니라, 적대적 상태를 전제로 하면서도 전면전을 방지하기 위한 ‘긴장 관리의 기술적 용어’로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우리의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소리를 들고나오고있는데 ... 적들은 지금 대화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 미사일능력은 더욱 강화》된다고 하면서 대화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내놓고 떠돌고있습니다. ...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속제장》에서 옮겨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조선중앙통신, 2025/09/22).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자주적으로 나아가는 나라들에 악랄한 경제적압력을 가하는 한편 체제를 변화시키면 저들과 협력할수 있다고 유혹하고있다. 제국주의의 《선의》에 기대를 걸면서 평화적공존을 꿈꾸는것은 제손으로 제목을 조이는 자멸적인 망동이다. 자주적원칙을 쫓버리고 제국주의와 타협하면 국가의 운명을 외세에게 통채로 빼앗기는 결과밖에 차례지는것이 없다(로동신문, 2024/12/15).

하지만 이미 천명했듯이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미국이 관습적으로 우리에게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대응에 일관할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 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평화적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것에 준비되어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것이 아니다(조선중앙통신, 2026/02/26).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공존’ 개념은 최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되어 이해될 수 있다. 첫째, ‘공존’은 상대 체제에 대한 상호 인정이나 관계 정상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수용하되 이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적대의 대상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즉 ‘공존’은 적대의 종식이나 완화가 아니라, 적대가 상시화된 상태에서 충돌만을 관리하는 관계 설정의 담론 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은 체제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만 재현되고 있다.

둘째, ‘공존’의 잠재적 대상은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에만 국한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로동신문』 등 북한 매체의 담론 지형을 살펴보면, ‘적대적 2국가론’의 선포 이후 남한을 철저히 분리하고 단절해야 할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공존’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결 구도를 표방하면서도, 이른바 ‘핵보유국 간의 실질적 힘의 균형’이라는 틀 안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공존의 여지를 탐색하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주창하는 ‘공존’이 보편적인 평화 지향이나 관계 정상화라기보다는 체제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표를 최우선하여 ‘공존’ 또는 ‘적대’의 대상이 취사선택되는 ‘선택적 기표’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남한을 향한 극단적인 타자화와 적대성의 고착화는, 대미 관계에서 체제의 보위를 도모하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대칭적 공존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공존’이 상정하는 시간적 지평 역시 축소되어 장기적 또는 미래지향적 평화체제 구축이나 관계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기대는 현재의 ‘평화’, ‘공존’ 또는 ‘평화공존’의 회의적·부정적 담론 속에서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서 논하는 ‘공존’은 미래를 향한 단계적 변화의 과정이라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충동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상태 관리의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일이나 항구적 평화와 같은 미래 지향적 목표는 서사의 중심에서 후퇴하고, 현재의 군사적 균형과 억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이 실질적 목표로 부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평화’ 또는 ‘공존’의 담론을 통해 남북관계는 변화보다는 안정적 긴장의 지속이라는 틀 안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공존’은 사실상 ‘관리 가능한 적대’ 논리의 부속물로 치환되어, 남북 간 신뢰의 축적과 상호 의존의 확대를 전제하는 협력적 공존 공간 확보의 가능성은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담론의 구조적 전환 속에서, ‘평화·공존’은 남북이 협상과 대화를 설계할 수 있는 공통 공간으로서의 사용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오히려 각자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상대의 책임을 부각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상호 이해와 타협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평화·공존’ 개념이 담론적 차원에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 V. 결론: 자기재현 전략의 효과와 위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김정은 체제의 ‘적대적 2국가론’을 통한 ‘국가’와 ‘민족’, ‘평화’와 ‘공존’의 담론들은 북한의 자기재현 전략과 남북 관계 구조를 동시에 재편하는 정치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평화’를 ‘자위적 서사’ 속에서, ‘공존’을 ‘긴장 관리의 기술’ 속에서 서술하는 전략을 통해, ‘적대적 2국가’의 ‘현실’을 ‘자연스러운 질서’로 정착시키는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 이 서사 속에서 북한은 강력한 자위력과 전략적 인내를 통해 적대적 환경을 관리하는 주체로, 남한은 구조적 적대자이자 외세와 결탁한 위협 요인으로 재현된다. 이러한 자기재현 전략은 내부적으로는 체제 안정과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적대적 공존의 서사는 대내적으로 경제난과 제재, 외교적 고립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고, 주민들에게 ‘적대적 환경 속 강국 건설’이라는 의미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결합된 집단 정체성을 재확인시킬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남한과의 ‘평화·공존’ 담론을 통해 기대할 수 있었던 ‘통일’ 또는 ‘협력’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공통의 가치 기반을 소멸시키고, 남북 간 이질성을 고착화하는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정권의 ‘적대적 2국가론’을 통해 보여지는 자기재현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족’에서 ‘국가’로 담론의 중심을 전환시키고, ‘우리 국가제일주의’ 논의를 강조하는 것은 남북을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상상해 온 기존의 인식 틀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주의 조선’을 하나의 완결된 전략국가로 상징하는 틀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통일과 민족이라는 범주가 더 이상 체제의 핵심 과제를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충분한 설득력, 즉 공간을 제공하거나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 존립과 체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당화 논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민족·통일 담론

이 체제 정당화의 핵심 서사에서 점차 주변화되고, 남북 관계는 ‘분단된 두 주권 국가’ 사이의 특수한 적대적 공존 관계로서 재규정되고 있다.

둘째, ‘평화’와 ‘공존’의 의미는 상호 호혜적 협력이나 상호 인정의 언어에서 이탈하여, 체제 생존과 자위권 확보, 긴장 관리 능력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과 제재 장기화 속에서, 평화를 협력의 결과가 아니라 억제력의 성취로 설명하는 것이 체제 논리상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평화’는 군사력과 전략적 억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공존’은 적대적 구도를 전면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통제·관리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변환되었음을 논할 수 있다. 그 결과 남북 간 장기적 협력이나 제도화된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언어적·상상적 기반은 점차 축소되며, 남북관계는 적대를 전제로 한 관리의 대상이라는 인식 틀이 보다 공고화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국가-수령-인민’의 유기체적 일체화를 통해 공동체적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은정권이 자신을 국제적 경쟁과 적대 속에서 국가를 이끄는 전략국가의 수장으로, ‘인민’을 그 국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핵심 주체로 재현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속에서 주민들은 단순한 통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주체로 호명함으로써 내부 동원과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적대적 공존’의 서사는 외부의 압박과 위협 속에서도 버텨내고 성장하는 결속력 있는 공동체로서 북한주민들을 (비자발적으로) 재현해내며, 체제의 지속 가능성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주체성’은 국가가 설정한 발전 목표와 과업의 범위 안에서만 의미를 갖도록 한정되고, 개인의 삶의 문제나 사회적 요구는 국가 발전이라는 집합적 목표 속에 포섭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종합하면, 김정은정권의 집단적 차원에서의 자기재현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체제 안정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족·평화·공존이라는 개념들이 남북관계를 연결해 왔던 상징적·담론적 자원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남북관계를 협력과 전환의 대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차 축소시키는 한편, 적대의 관리라는 제한된 틀 안에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체제가 기존 담론을 단절적으로 폐기한 결과라기보다는, 분단 체제와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통치 정당성과 체제 생존을 안정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선택한 자기재현 전략의 재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민족’과 ‘통일’이라는 상징이 더 이상 체제 안정성 또는 대내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 기표로서 기능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가와 주권을 전면화하는 방향으로 담론의 중심을 전환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적대적 공존’은 남북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정책 언어를 넘어, 현재의 분단 질서를 자연화하고 장기화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자기재현 전략이 인민을 국가 발전의 주체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국가-수령-인민’의 유기체적 일체를 강조함으로써, ‘인민’을 단순한 통치 대상이 아니라 강국 건설의 참여자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부 동원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동시에 체제 담론이 주민들의 삶과 일정한 접합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 자기재현 전략은 주민들의 반응과 수용 가능성을 전제로 조정되며, 담론은 사회 내부의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수정되는 성격을 띤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자기재현은 고정된 이념 체제라기보다, 역사적 조건과 사회적 반응에 대응하며 재구성되는 과정적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 시기에 형성된 민족 중심 서사와 평화공존 담론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전략 환경 속에서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의미가 재배치된 상태로 존속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이러한 유산을 선택적으로 계승·변형함으로써, 과거의 정통성과 현재의 통치 논리를 동시에 유지하려는 균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김정은 체제의 ‘적대적 2국가론’을 통한 자기재현 전략은 단기적으로 체제 안정성 확보라는 실천적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연결해 왔던 상징적 언어와 공동의 의미 지평을 소진시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화’는 협력의 언어가 아니라 역제의 결과로, ‘공존’은 전환의 과정이 아니라 적대 관리의 기술로 재정의되며, 남북 간 상호 번역 가능한 언어 자원이 축소되고 관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정권의 ‘2국가론’을 통한 자기재현은 단순

히 현재의 대남 전략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한반도 질서에서 평화와 공존을 둘러싼 담론적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구조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적대적 2국가론’을 통한 자기재현 전략은 현 국면의 통치 논리를 넘어, 향후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상상하고 논의하는 담론적 조건이 어떤 방향으로 형성될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분석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6년 2월 2일 | 심사일: 2026년 3월 11일 | 게재확정일: 2026년 3월 31일

## 참고문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2020.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창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구갑우. 2024.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현대북한연구』 27(1): 9-53.
- 김보민. 2021. “북한 민족제일주의 담론의 변화: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현대북한연구』 24(1): 139-173.
- 김병로. 2024. 『한국과 조선: 남북한 정통성 경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연호. 2021. “2000년대 한국 포스트 다큐멘터리의 자기-재현 전략.”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2): 528-537.
- 박계리. 2020. “북한의 선전화와 직관선동: 선전 선동의 내면화 과정 연구.” 『미술사학보』 54: 205-221.
- 박태상. 2019. “북한 김정은의 선전·선동 전략과 현상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23: 40-109.
- 배성인. 2002. “남북한 민족주의와 통합 이념의 모색.” 『통일문제연구』 14(1): 231-256.
- 이무철. 2024.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전환 분석: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7(1): 54-90.
- 이지순. 2019.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KINU Insight』 2019-04. 서울: 통일연구원.
- 임수진. 2024.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북한의 남한 관련 보도 변화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_\_\_\_\_. 2025. “남과 북의 평화공존 담론 변화 분석 및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정영철. 2011. “북한 주민의 의식과 행위: 일상의 소란과 행위.” 『북한학연구』 7(1): 75-101.

\_\_\_\_\_. 2020.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23(1): 8-38.

조정아. 2008.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한동호·박형중·최사현. 2018. 『북한에서 국가-사회 관계 양상 연구』. 연구총서 18-21. 서울: 통일연구원.

Bennett, W. Lance and Alexandra Segerberg. 2013. *The Logic of Connective Action: Digital Media and the Personalization of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utler, Judith. 1997. *The Psychic Life of Power: Theories in Subjectio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Elias, Norbert. 1992. *Time: An Essay*. Oxford: Blackwell.

Foucault, Michel. 1982. “The Subject and Power.” *Critical Inquiry* 8(4): 777-795.

Habermas, Jürgen. 1989.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Cambridge, MA: MIT Press.

Hall, Stuart. 2018. “Signification. Representation. Ideology: Althusser and the Post-Structuralist Debates.” in Peter Lunenfeld ed., *Stuart Hall Lives: Cultural Studies in an Age of Digital Media*, 65-85. New York: Routledge.

Jowett, Garth S. and Victoria O'Donnell. 2019. *Propaganda & Persuasion*. 7th ed. Thousand Oaks, CA: Sage.

Laclau, Ernesto and Chantal Mouffe. 2001[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Verso.

Lasswell, Harold D. 1927. *Propaganda Technique in the World War*. New York: Knopf.

Marlin, Randal. 2013. *Propaganda and the Ethics of Persuasion*. 2nd ed. Peterborough: Broadview Press.

Poster, Mark. 1990. *The Mode of Information: Poststructuralism and Social Contex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cœur, Paul. 1984–1988. *Time and Narrative*. 3 vo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 1992. *Oneself as Anoth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cott, James C. 1990.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Woolley, Samuel C. and Philip N. Howard, eds. 2019. *Computational Propaganda: Political Parties, Politicians, and Political Manipulation on Social Med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1차 자료

- 로동신문. 2022. 9. 7. “강국의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웨침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리 수령제일주의이다.”
- \_\_\_\_\_. 2004. 1. 1. “당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 \_\_\_\_\_. 2019. 1. 27.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 \_\_\_\_\_. 2019. 1. 8.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 \_\_\_\_\_. 2020. 6. 7. “우리 국가제일주의.”
- \_\_\_\_\_. 2022. 6. 7. “우리 국가제일주의.”
- \_\_\_\_\_. 2022. 9. 1.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자.”
- \_\_\_\_\_. 2022. 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주제111(2022)년 9월 8일.”
- \_\_\_\_\_. 2023. 7. 2. “위대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존엄 높은 공화국의 국기와 국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랑의 감정이 날로 더욱 승화되고있다.”
- \_\_\_\_\_. 2023. 12. 31. “조선로동당 중앙이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 \_\_\_\_\_. 2024. 1. 1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 \_\_\_\_\_. 2025. 6. 3. “평화에 대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있다.”
- 조선중앙통신. 2019. 4. 13.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 \_\_\_\_\_. 2019. 11. 8. “조선외무성 국장 군사연습 해명전에는 북남접촉 어렵다.”
- \_\_\_\_\_. 2025. 7. 28. “김여정부부장 한국과 마주앉을 일 없다.”
- \_\_\_\_\_. 2025. 9.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회의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

Abstract

## North Korea's Self-Representation Strategy through the "Two Hostile States" Narrative: The Transformation and Effects of the "Nation" and "Peace and Coexistence" Discourses

Sujin Lim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

This paper analyzes how North Korea is redefining and representing itself and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narrative of "hostile coexistenc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following the formalization of the "Two Hostile States" narrative in 2023. In particular, this paper conceptualizes the "Two Hostile States" narrative as a collective self-representation strategy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examines how key concepts such as nation, state, peace, and coexistence are being reconfigured in this process.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d North Korea's official discourses, utilizing discussions on the politics of self-representation in authoritarian regime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The analysis revealed three key characteristics of the self-representation strategy of Kim Jong-un regime. First, the shift in the discursive axis mediated by "Our State-First Principle" weakened the existing framework that had posited the two Koreas as a single national community while simultaneously functioning to represent "Socialist Korea" as a self-contained strategic state. Second, peace and coexistence have been recoded from a language of mutual recognition and cooperation into political rhetoric that justifies regime survival, the right to self-defense, and the ability to manage tensions, thereby shrinking the future-oriented discursive space in which long-term inter-Korean cooperation and an institutionalized peace regime

could be imagined. Third, the self-representation strategy emphasizing the organic unity of “state–leader–people” functioned as a strategy to maintain internal cohesion and legitimacy by adjusting the logic of the “leader’s” governing legitimacy and the “people’s” participation through the comprehensive symbol of the “state” according to the situat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while such self-representation strategies may contribute to regime stability in the short term, in the long term these strategies weaken the symbolic and discursive resources that have historically connected inter-Korean relations, thereby constraining the very conceptual conditions necessary for future discussions pertaining to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 “Two Hostile States” Narrative, Self-Representation, Our State-First Principle, Nation, Peace, Coexistence